

비상경제장관회의

24-5-1

(공개)

중소기업 · 소상공인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

2024. 3. 13.

관계부처 합동

순서

I. 민생토론회 주요내용 1

II. 후속조치 이행현황 및 향후계획 2

I. 민생토론회 주요내용

◆ (핵심 메시지) “함께 뛰는 중소기업·소상공인, 살맛나는 민생경제”

☞ 9개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, ‘함께 줄이는 부담’, ‘함께 만드는 환경’, ‘함께 키우는 미래’라는 3개 주제를 중심으로 토론

* (일시/장소) 2.8.(목) 10:00~11:00 / 성수동 폐공장 ‘레이어57’ (서울 성동구)

◆ 참석자들은 비용부담 완화, 불합리한 행정처분제도 개선, 스타트업 법률 지원 등을 건의하였고, 정부는 신속한 조치방안 답변

□ 첫 번째 토론주제, ‘함께 줄이는 부담’에서는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 방안 중심으로 논의 진행

○ (현장의견) 고금리·고물가로 비용부담이 심화*되고 있으며, 나이를 속인 청소년의 술·담배 구매로 ‘행정처분’을 받아 억울**하다고 호소

* 꽃집 사장 : “최근에는 전기요금을 줄이려고 냉장고를 끄고 지내기도 함”

** 슈퍼마켓 사장 : “마스크, 모자를 쓴 청소년에게 딸이 담배를 팔았다가 벌금형, 영업정지”

○ (정부답변) 소상공인의 비용부담 경감을 지원*하고, ‘불합리한 영업정지’ 처분은 신속하게 개선하겠다고 답변

* 간이과세자 기준상향, 대환대출, 중소기업권 이자환급, 전기요금 특별지원 등

□ 두 번째 토론 주제, ‘함께 만드는 환경’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방안 중심으로 논의

○ (현장의견) 구인난이 심각하며 외국인력 활용도 쉽지 않고, 대기업의 ‘일방적 계약해지’ 등에 따른 ‘불공정 피해’가 있다고 호소

○ (정부답변) 외국인력 쿼터확대,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단축 등 제도개선을 완료하였고,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

□ 세 번째 토론 주제, ‘함께 키우는 미래’에서는 스타트업·벤처의 성장동력 확충방안을 중심으로 논의

○ (현장의견) 스타트업 해외진출시 해외법률 적용* 및 투자유치 어려움, 지역 창업 생태계의 열악함 호소

* 스타트업 대표 : “글로벌 스타트업들에게 성장 단계에 맞는 밀착형 법률지원 필요”

○ (정부답변) 스타트업 법률지원을 강화하고, 투자유치가 쉽도록 모태펀드를 1분기 중 출자하며, 지역 창업인프라를 확충

Ⅱ. 후속조치 이행현황 및 향후계획

1. 비용부담 완화

◆ 법령 개정, 사업 공고 및 신청·접수 등 소상공인 비용부담 완화 후속조치 차질없이 이행중

□ (간이과세자 기준 상향)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완료 (2.29)로 '24.7.1부터 상향기준 (연 매출 8천만원 미만 → 1억 400만원 미만) 적용 (기재부)

□ (전기요금 부담 경감) 연매출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* 대상으로 2.21.부터 접수를 받아 서류제출 없이 최대 20만원의 요금 차감 (중기부)

* 3.12 기준 총 337,682명 신청 (빠르면 3.20부터 차감된 요금 고지서 발급)

○ 다만, 한전에 계약자 정보가 없는 비계약 사용자*는 3.4.부터 접수를 받아, 서류 심사 후 전기요금 환급 조치

* 전기계약 명의가 타인인 경우, 타인이 계약한 전기 사용 등

□ (대환 대출) 중·저신용(신용평점 839점 이하) 소상공인의 고금리(연 7% 이상) 대출을 저금리(연 4.5%)로 전환할 수 있도록 2.26.부터 접수 개시 (중기부)

□ (이자 환급) 저축은행 등 중소기업권에서 5~7%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해 3.18.부터 신청 받아, 최대 150만원까지 환급 예정 (중기부·금융위)

2.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

◆ '선량한 소상공인 보호' 조치를 이행하는 내용의 유튜브 쇼츠 영상들은 조회수가 600만에 근접하는 등 국민들도 큰 관심·호응

◆ 더 이상 '억울한 소상공인'이 없도록 관계부처가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힘을 합쳐 법령 개정, 적극행정 등 후속조치 이행중

□ 법령 개정 전 선행 조치

- 영업자가 '성실하게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'이 입증되면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토론회 직후 광역지자체에 협조요청(공문) (**식약처**)
- 관련법령 개정(4월) 전 '억울한 피해사례'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행정으로 행정처분 면제규정 선 시행 (2.14~) (**법부처**)
 - * (**법부처 협의체 운영**)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적극행정 조치 및 법령개정 논의를 위해 협의체 운영(중기·기재·문체·복지·여가부, 식약·법제처, 경찰청, 광역지자체)

□ 법령 개정 등 제도 보완

- 신분증 성실확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행정처분 면제 가능하도록 관련 3법 시행령·시행규칙* 개정 (4월 완료) (**식약처 · 여가부 · 기재부**)
 - * 식품위생법 시행령·시행규칙, 청소년보호법 시행령, 담배사업법 시행규칙
- 입법예고 기간 단축* (원칙 40일 이상), 법제처의 법령 개정안 사전 심사 등을 통해 신속한 법령 개정 추진중
 - * 식품위생법 시행령·시행규칙 (20일),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(12일),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(11일)

3. 스타트업 법률지원

◆ 온라인 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준비 작업을 민·관, 부처간 협업으로 진행하는 등 차질없는 후속조치 이행중

- 민·관(경총, 중견련, 대한상의, 코트라) 협업방식으로 추진 방향을 수립 (2.22) 하고, 4월중 '스타트업 법률지원 서비스' 개시 (**중기부 · 법무부**)
- 온라인 법률상담 신청 창구를 창업지원포털* 내 개설하고, 법무부 법률지원단 등을 활용하여 '전문 상담 서비스 제공' ('24. 4~)
 - * 창업기업 대상 정책정보 제공 종합 포털 사이트(k-startup.go.kr, 회원 68만명)
- 법률 상담사례는 계속 축적하여 노무·법무 등 분야별로 DB화하여 분류하고, FAQ 형식으로 정리하여 온라인 제공 ('24.6~)
- 인공지능 기반 검색 서비스 등 이용자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시스템 지속 보완·개선 ('24.하)

4. 기타 과제

◆ 그 외 외국인력 활용 제도개선, 벤처·창업 활력 제고 등의 과제들도 법률·제도개선, 사업공고 등 차질없이 후속조치 이행 중

□ (외국인력 활용제도)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 인원을 2배 상향하고, '24년 E-9 외국인 비전문인력 쿼터를 16.5만명까지 확대 완료 (고용부)

○ 또한, 외국인력 활용시 필요한 '내국인 구인노력 기간'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, 원하는 때 외국인력을 배치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

□ (공정환경 조성) 중소기업 피해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소송 과정에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*도 추진 (공정위)

* '24. 3분기 중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

□ (스타트업 해외진출) 글로벌 기업, 국내 대기업 등의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활용한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 (중기부)

* (가칭) 스타트업 해외진출 멘토단 : 해외실증, 글로벌 진출전략 멘토링, 동반 해외진출 등 지원

□ (벤처투자 활력 회복) 총 8개 부처* 1.5조원 규모의 모태펀드 출자 사업을 3.13 기준 공고 완료 (법부처)

* 문체부·해수부(1.31, 4,195억원), 중기부(2.5, 9,100억원), 과기·복지·교육 등(3.6, 1,579억원)

○ 이후 공고 예정인 1,200억원* 포함, 1분기내 1.6조원을 신속 출자 하여, 총 2.8조원 규모 벤처펀드 조성 ('24.3~)

* 환경부(미래환경 분야), 복지부(바이오헬스 분야), 과기부(메타버스, 뉴스페이스 분야)

□ (창업지원 인프라 확충) 창업생태계 글로벌화의 교두보가 될 '한국형 스테이션-F' (글로벌 창업허브) 구축 후보지 분석 연구용역 착수('24.3~) (중기부)